

“울산 석유화학 해법은 전기료 감면·친환경 소재 활성화”



‘울산 산업 전환의 시간’ 네번째 좌담회가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울산 석유화학의 선택’을 주제로 지난 23일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실에서 열렸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경상일보-울산TP ‘울산 산업 전환의 시간’ 좌담회

(4)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울산 석유화학의 선택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수년째 위기를 겪고 있는 울산 석유화학 산업이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포트폴리오 확대 노력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전기요금 등 유틸리티 비용을 절감해 글로벌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규제에 대응해 국내시장부터 친환경·바이오 소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본사와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조영신·울산TP)는 지난 23일 울산TP 원장실에서 ‘울산 산업 전환의 시간’ 네번째 좌담회를 열고,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울산 석유화학의 선택’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좌담회는 조영신 울산TP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준범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산업정책본부장, 서봉국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 이필용 금호석유화학 전무, 박동경 송원산업 연구소장, 권성현 한진케미칼 부사장 등 산·학·연·관의 핵심 전문가들이 참석해 울산 화학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기업들은 석유화학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큰 경쟁국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등 최근 수년 새 급격하게 오른 유틸리티 비용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산업정책본부장은 “우리 석유화학 기업의 생산 원가를 ‘100’으로 보면 원재료비가 76, 유틸리티가 20을 차지하는 반면, 경쟁국인 중국은 원재료비 68, 유틸리티 15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비 20%가량 제조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며 “일률적인 인하가 어렵다면, 울산 남구 등 산업위기관리지역에 한해 서라도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감면해 주는 특 단책을 관련 부처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동경 송원산업 연구소장은 “중동발 충격은 단순 가격 상승을 넘어 공급망 마진 붕괴로 이어지고 있고, 중소기업은 위기 때 원재료 확보 능력이 취약해 생존을 위협받는다”며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와 함께 울산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중앙정부의 제도적 매칭이 병행될 때 비로소 가시적인 원가 절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석유화학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친환경·바이오 소재’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쏟아졌다. 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친환경·바이오 소재 의무사용 법제화와 소비자 대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용 금호석유화학 전무는 실제 판매 사례를 들며 시장의 모순과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전무는 “PS(폴리스타이렌) 제품에 리사이클 원료를 사용해 대기업 등에 판매하고 있지만 품질과 가격 저항 장벽이 높은 게 현실이다”며 “공공조달과 대기업 제품군부터 단계적인 재생원료 혼합 의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친환경 리사이클 규제 도입 정책이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수시로 유예되거나 뒤바뀌면서 대규모 친환경 사업 투자를 기획했던 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고 사업을 접어야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리사이클 생태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토론했다.

권성현 한진케미칼 부사장은 “친환경·바이오 화학소재는 미래에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방향이지만 당장의 경제성 문제로 기업들이 주저하고 있다”며 “그린소재는 규제를 통해 강제로 시장을 열고, 그 시장 확대를 통해 기술이 발전하며 최종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친환경 제품의 의무사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봉국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은 “페플라스틱 처리 등 환경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할 때, 친환경 전기차 보조금처럼 가격 차이를 보전해 주는 친환경 소재 보급 보조금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자동차 산업의 폐기를 저감 위해 친환경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를 일일 비용 이상 의무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유럽의 환경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제조업에 AX(AI 전환)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울산 석유화학업종은 다품종·소량생산인 지역 중소·중견기업은 직접적인 생산에 AI를 적용하기보다는 안전·유지보수 등에 도입이 선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성현 부사장은 “정밀화학 중소기업은 회분식 공정 특성상 소량 다품종 제품 교체가 빈번하고 자동화율이 낮아 생산 공정에 곧바로 사람을 대체하는 완전 무인화는 어렵다”며 “중소기업의 AX는 예지보전, 이상징후 감지, 그리고 재고관리와 선입선출이 취약한 물류 자동화 등 생산지원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홍준 화학산업협회 본부장
제조 경쟁력 中 앞서
위기지역 전기료 감면
특단대책 검토 필요성



박동경 송원산업 연구소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규제 패러다임 전환
원가절감 돌파구 마련



이필용 금호석유화학 전무
품질·가격 저항 높아
‘재생 원료’ 사용 애로
혼합의무제 도입 강조



권성현 한진케미칼 부사장
연구개발 AX 위해
공공기관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지원 당부



서봉국 화학연구원 본부장
사회적 비용 감안해
친환경소재 보조금 등
유럽 정책 벤치마킹



김준범 울산대 교수
중기, AI 답러닝 활용
이상징후 사전 포착
대형사고 확률 줄여야



조영신 울산테크노파크원장
부산물 연료 허용
유틸리티 비용 절감
친환경소재 법제화를

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준범 교수는 “안전 분야야말로 AI 관련 기술이 가장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공정 온도, 압력, 유량 등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답러닝 학습을 통해 공정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 대형 사고 확률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들은 연구개발 분야 AX를 위해 공공 주도 인프라 확충도 건의했다. 권성현 부사장은 “중소기업은 우수 연구자를 뽑기 힘들고 개인 연구자의 오랜 경험(암묵지)에만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며 “개별 구축이 불가능한 ‘AI 자율 배합·합성 실험실’을 울산TP 등 공공기관이 구축해 오픈랩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줄이고 소재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신 원장은 “이번에 울산에 확정된 산업 위기관리대응지역 지정은 울산 화학산업의 무너진 마진을 보전하고 고용을 유지해 줄 가장 든든한 정책적 보호막이자 체질 개선을 성공으로 이끌 강력한 마중물이다”며 “이 소중한 정책적 기회가 실질적인 구조 고도화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 수혈과 세제 혜택이 가동되는 동안, 환경 기준을 통과한 부산물 연료를 과감히 허용해 유틸리티 비용을 뿌리부터 짚어 주고, 친환경 소재 법제화 유도 등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부채는 줄이고, 희망은 더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무엇인가요?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부채를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자격이 궁금해요.
재해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재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입니다.

■ 지원내용도 알려주세요.
공사가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 농업인에 장기임대(7~10년)후, 농업인이 환매(다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입대상→ 농지(전·답·과수원)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농업용시설) 임대기간 만료시점 감정평가금액
매입상한 → 지원한도 : 6~11.3만원/㎡

■ 상담/문의
1577-7770



kr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